

## 칼럼

## 건설산업의 新성장 동력 찾기



박 상 규 |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우리 국토는 지난 50년 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1960년 2,500만 명이던 인구는 이제 5,000만 명으로 늘어나 1km<sup>2</sup>당 500명이 살고 있는 과밀 국가가 되었다. 621개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고, 도로 연장은 2만 7,000km에서 10만 5,000km로 늘어났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16.8%에서 93.5%로 증가하는 등 SOC 부문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이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들 인프라 시설의 실상은 간단하지 않다. 1960년대부터 전국에 건설된 SOC 시설, 방재, 생활환경 시설들은 이제 노후화되어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아날로그식 SOC와 최첨단의 디지털 시설이 공존하는 것은 일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일석사조(一石四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통시설의 경우 전국의 4차선 이상 도로에 ITS를 적용하고 기존 고속도로는 smart highway로 전환하는 등 SOC와 IT 기술을 융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인간 중심의 SOC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는 고속철도를 신설하기보다 일반 철도의 성능을 개량하여 KTX 열차를 운행한다면 비용은 대폭 절감하면

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소형 항만들도 마리나항을 겸하면서 배후지를 정비한다면 새로운 레저 관광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다.

전국 농촌 마을의 123만호에 달하는 노후 석면 지붕을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는 것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농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침체된 지방 중소 도시는 도심이나 인접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문화·복지·편의 등 청년층에 매력적인 복합 공간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금융·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경제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전국의 해안·하천과 홍물로 방치된 각종 저류지, 배수지, 제방 등의 방재 시설도 쓰나미나 지진에 안전하면서도, 주민이 언제든지 휴식·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친화형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4대강 지류에 해당하는 하천을 지역별 특색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 하천으로 정비한다면 문화·생태 관광지로도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개발 연대에 건설된 아날로그적인 도시와 SOC 시설을 IT·환경·문화를 결합한 smart 도시와 smart SOC로 재생하여, 스위스와 같은 명품 국토를 만들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와 함께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CERIK